

NSP

<http://www.eai.or.kr>

Report

National Security Panel

EAI 외교안보센터 : 국가안보패널 정책보고서 ②

이라크 파병과 국가이익

목차

국익으로
국가안보패널

국가안보 패널 연단

● 이회성

외교안보센터장

● 김성희

외교안보센터장

● 이 정

외교안보센터장

김성환(외교안보연구원)

김재현(중앙대법학)

박종현(서울대법학)

신상호(서울대법학)

이재형(세종연구소)

박종호(국방연구원)

● 권 사

정책연구실



동아시아연구원(EAI) 외교안보센터

Tel No. 82-2-2277-1683

Fax No. 82-2-2277-1684

<http://www.eai.or.kr>



이라크 파병과 국가이익

(요약)

미국으로부터 추가파병 요청이 있는 후 거의 1년간 지속된 고통스런 논쟁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 이라크 전쟁은 과연 역사적 명분을 찾을 수 없는 잘못된 전쟁인가? 둘째, 이라크 파병을 통해 추구하려고 하는 한국의 국익은 과연 무엇인가? 셋째, 이라크 파병이후의 한미관계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1988년 자국민 쿠르드족 5,000명을 화학무기로 학살하고 수많은 인권유린을 행한 후세인 정권은 1991년 걸프전 종료 직후부터 2002년까지 무장해제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17차례나 지속적으로 거부했다. 유엔이 외교적 압박과 경제봉쇄를 통해 제재를 가했지만 사담 후세인은 ‘부분적인’ 협력을 통한 지연전술을 폈을 뿐 ‘전면적인’ 협조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세인의 ‘WMD 게임’은 WMD 보유 가능성에 대한 미 행정부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후세인의 폭정은 WMD 의혹과 결부되어 비록 ‘절차적 정당성’ 획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내용적 정당성’을 상당히 제공한 상태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를 ‘선제공격 독트린’의 즉각적인 대상으로 삼아 군사적 공격을 가하기에는 WMD 관련 정보가 불충분했다. 결국 이라크전의 정당성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 되었으며, 이러한 논란은 종전 후 이라크 내 저항세력의 사기를 올려주어 사태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사태의 해결여부는 중동전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으므로(유엔 결의 1546호), 한국의 이라크 파병은 한국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거시적 중동질서유지와 이라크에 대한 인도주의적 기여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열어놓은 ‘판도라의 상자’를 어떻게 해서든 닫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의 주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반테러전쟁이 미국만의 문제인 것처럼 방기할 경우 결국 무질서가 난무하는 테러리스트들의 세상이 도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 한국의 이라크 파병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9·11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미국은 동맹관계를 평가하는 데 있어 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전쟁에의 참여 여부를 가장 큰 기준으로 적용해오고 있다. 냉전시대에 미국은 동맹국들을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대가로 미국의 리더십을 따르도록 요구했었으나, 21세기 미국의 동맹개념은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세계화된 국제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신용’을 제공하는 대신 미국의 리더십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동맹은 20세기적 ‘혈맹’(血盟) 개념으로부터 21세기적 ‘신맹’(信盟) 개념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이라크 파병은 미국과의 신맹을 이룩하기 위한 투자, 즉 ‘용신’(用信)의 과정이다. 미국은 이라크의 재건을 통하여 바그다드를 중동의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라크가 재건에 성공할 경우 한국은 미국과 함께 카스피해 서쪽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어 에너지 안보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이라크 평화재건을 통해 이라크인의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한미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인간안보를 위해 한미양국이 협력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이 전통적인 군사안보적 성격을 뛰어넘어 인류의 보편가치를 지향해 간다는 것을 뜻한다.

한미동맹의 지속 필요성에 한미 양국이 공감하는 이상,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에 한



미동맹을 재조정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동맹의 '21세기적 비전'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한미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위협에 대응하기보다는 평화를 주도해 나가는 동맹, 보다 유연하고 독자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관계를 실현하는 동맹, 더 나아가 상호 운용성이 지금보다 더 확대된 '포괄적 지역안보동맹'(comprehensive regional security alliance)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한미 포괄적 동맹 관계는 전통적인 군사 위협에 대처한다는 차원보다는 새로운 안보 위협, 즉 테러, 마약, 환경오염, 불법인구이동, 해적 행위 등에 포괄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21세기형 '인간안보동맹'(human security alliance)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통해 한미양국간 신뢰가 얼마만큼 회복되는지에 달려있다. 상호신뢰에 바탕을 두고 미국과 한국이 정치·안보·경제 분야를 망라한 신용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21세기형 동맹, 즉 신맹(信盟)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반테러전쟁을 미국만의 전쟁이라고 치부해버릴 경우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 반테러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는 이상 국제사회는 무질서와 혼돈이 뒤범벅된 세상, 즉 테러리스트들이 바라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유엔이나 다른 강대국들이 미국의 힘을 대신할 수 없는 이상 미국이 국제관계를 보다 현명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국제사회의 성원들이 지원하고 조언해야 한다.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당장의 '보이는 죽음'과 미래의 '보이지 않는 죽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순간의 전략적 판단 실수로 당장의 보이는 죽음을 피할 수 있을지언정 미래에 보다 큰 규모로 더욱 치명적인 형태로 보이지 않는 죽음을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세계화된 국제금융사회에서 신용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IMF 사태'라는 뼈아픈 경험을 했고, 그나마 안보분야에서 쌓은 신용 덕분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파병을 철회함으로써 당장의 보이는 죽음을 막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제2의 금융위기를 겪게 되었을 경우 안보분야의 축적된 신용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미래의 보이지 않는 죽음을 막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바로 이라크 파병인 것이다.



이라크 파병과 국가이익

대표집필 : 김 성 한(외교안보연구원)

I. 파병의 정치

이라크 전쟁이 2개월 만에 사담 후세인 정권의 몰락으로 귀결되자 2003년 5월 1일 부시 대통령은 사실상의 종전을 선언했다. 그러나 “큰 전투는 끝이 났다”는 그의 말에는 “작은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속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라크 ‘저항세력’에 의한 작은 전투를 잠재우기 위해 부심하던 부시 미 행정부는 이미 600명의 서회·제마부대를 파병한 한국정부에게 2003년 9월 추가 파병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우리사회에서는 도대체 왜 한국이 추가파병을 해야 하느냐를 놓고 국론분열에 버금가는 대논쟁이 벌어졌다. “명분 없는 전쟁에 한국이 추가파병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파병반대론과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요청에 응해야 한국의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파병찬성론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고심 끝에 노무현 대통령은 추가파병을 결정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현안이 있는 만큼 이를 풀어가야 할 입장에 있는 우리로서는 어느 때보다 한미관계를 돈독히 해야 하며 지금이야말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때”라면서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¹⁾ 약 3000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파병하기로 한 파병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2004년 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파병지를 물색하고 이라크 평화재건과정에 한국이 기여할 구체적 방안 마련에 고심하던 한국정부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이라크 사태로 인해 적지 않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2004년 3월 파병국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대형 테러사태가 발생한 직후 스페인은 자국군을 이라크로부터 철수시켜 버렸다. 한국군 파병예정지인 키르쿠크의 치안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4월 7일 한국군 선발대가 가고 4월말 본대를 보내기로 하는 등 추가파병계획을 착착 진행시켜 오던 한국정부는 3월 19일 “한미양국은 최근 키르쿠크의 치안상황이 나빠짐에 따라 한국군 파병지역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파병지역을 새로이 물색하기로 함에 따라 파병일정의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또 한차례의 논쟁이 전개되었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이라크 내 테러가 급증하고 스페인의 철군 등을 고려할 때 파병을 재고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파병을 하기로 해놓고 파병지의 치안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일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차라리 파병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강변했다. 그러한 가운데 6월 ‘김선일씨 사건’이 발생했다. 이라크 사태로 인한 테러의 피해를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한국도 테러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이 확인된 순간이었다. 마치 역사의 시계바늘이 정지해 버린 듯 김선일씨의 죽음 앞에 온 나라가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들었다. “그 허울 좋은 국익이 한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단 말인가?” “미국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의 젊은이들을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

1) 「연합뉴스」, 2003년 12월 3일.



모는가?” 이러한 ‘감상적 절규’를 뒤로 하고 한국정부는 이라크가 추가파병을 결정했다.

2003년 9월 미국으로부터 추가파병 요청이 있는 후 거의 1년간 지속된 고통스런 논쟁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 이라크 전쟁은 과연 역사적 명분을 찾을 수 없는 잘못된 전쟁인가? 둘째, 이라크 파병을 통해 추구하려고 하는 한국의 국익은 과연 무엇인가? 셋째, 이라크 파병이후의 한미관계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본 보고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 봄으로써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대내외 논의를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한다.

II. 이라크 전쟁의 역사성

1. 후세인의 ‘WMD 게임’과 미국의 이라크 전쟁

2001년 1월 집권직후 부시 미 대통령의 모습은 신중한 보수주의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클린턴 대통령의 ‘방만한 국제적 개입주의’를 비난하고, 미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관심과 행동을 집중하는 ‘선택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부시 대통령은 신보수주의자(neo-conservative)라기보다는 전통적 보수주의자(traditional conservative)에 가까웠다.

그러나,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8개월 만에 터진 9·11 테러는 부시 대통령 자신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9·11 테러는 미국 내 여론이 ‘군사력 우선주의’ ‘정권교체’ ‘선제공격’ 등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특히 9·11 테러는 그 이전까지 전통적 보수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부시 대통령이 신보수주의 정책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본격화하는 분수령이 되었다. 결국 부시 행정부는 2001년 10월 아프간 전쟁을 통해 알 카에다의 비호세력인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켰다.

아프간 전쟁을 신속히 마친 뒤 2002년도 부시 행정부의 전략적 시야는 중동으로 옮겨졌다. 미국의 정책담당자들의 머릿속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막는 것 이외에는 없었다. 이러한 우려가 집중된 곳이 중동이었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은 그 곳으로 모아졌다. 그 중에서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1988년 쿠르드족 마을 할라브자에 화학무기 공격을 가해 5,000명을 학살한 바 있는 후세인 정권은 1991년 걸프전 종료 직후부터 2002년까지 무장해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무려 17차례나 지속적으로 거부했다. 유엔이 외교적 압박과 경제봉쇄를 통해 제재를 가했지만 사담 후세인은 ‘부분적인’ 협력을 통한 지연전술을 펼칠 뿐 ‘전면적인’ 협조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세인의 ‘WMD 게임’은 여전히 WMD를 포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미 행정부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부시 행정부는 신속히 대외전략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2002년 6월 1일 미 육군사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미국에 의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테러집단이나 국가가 미국에게 테러를 가할 가능성이 농후할 경우 선제공격으로 이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미국의 각오는 백악관이 2002년 9월 20일 새로운 안보전략의 대강을 담은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 속에 집약되었다. NSS는 테러 및 WMD 위협 제거를 국가안보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필요시 단독행동 및 선제공격 불사, 그리고 이를 위한 반테러 국제연대 및 동맹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공세적인 안보

전략을 제시하였다. 신제공격론은 곧 ‘부시 독트린’으로 불리었다. 부시 행정부가 출범직후부터 ‘미국적 국제주의(American internationalism)’를 내세우며 미사일방어(MD) 추진, 교토 기후변화협약 비준 거부 등을 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판을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SS는 보다 강화된 형태의 ‘매우 미국적인 국제주의’(a distinctly American internationalism)를 표방하였다. 이는 곧 미국이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미국 중심적 국제질서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출이었다.

그러자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안보전략은 행정부 안팎에 포진하고 있는 신보수주의자들의 사교가 전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되었다. 레이건 행정부 이후 제대로 자신들의 이념과 전략을 정부 정책에 반영시킬 기회를 갖지 못했던 일련의 신보수주의자들이 9·11 테러사태를 계기로 부시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부시 대통령은 ‘기독교 근본주의적 도덕관’과 ‘군사력 우선주의’로 무장된 이들의 건의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것이었다.²⁾

이미 이라크 후세인 정권에 대한 의심의 고삐를 죄기 시작한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9·11 이후의 미국은 이러한 의심이 충분한 증거 위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이라크를 시발로 중동의 정치사회적 지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역사적 시간이 결코 미국의 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부시 대통령은 4년 전인 1998년 신보수주의자들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교체를 건의했던 이유에 대해 공감하기 시작했다.³⁾

후세인 정권이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박에 굴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 이라크를 북한 및 이란과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명명함으로써

2) 레이건 행정부 시기에 태동한 신보수주의 사조는 1989년 ‘전통적’ 보수주의적 색채를 띤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냉전 종식으로 인해 ‘시련기’로 접어들었다. 1990년대 초 부시 행정부의 딕 체이니(Dick Cheney) 국방장관은 폴 윌포위츠(Paul Wolfowitz), 루이스 리비(Lewis Libby) 등과 함께 과거 로마제국 시대와 비견되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지향하는 신보수주의적 ‘국방정책지침’(Defense Planning Guidance)을 준비하였으나, 전통적 보수주의자인 브렌트 스코크로프트(Brent Scowcroft) 안보보좌관과 제임스 베이커(James Baker) 국무장관이 탈냉전시대의 국제조류인 다자주의와 너무 동떨어졌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채택되지 못했다. 신보수주의의 약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더욱이, 1993년 클린턴 행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평등과 참여를 옹호하는 진보주의적 사조가 풍미하게 되면서 신보수주의의 그 수명을 다한 것으로까지 생각되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집권 2기에 들어서자 신보수주의자들은 ‘클린턴 이후’의 시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일련의 신보수주의자들은 1997년 6월 신보수주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신세기계획’(PNAC: 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을 설립, 1) 국방비 대폭증액, 2) 우방과의 동맹 강화와 적대정권 대처, 3) 정치·경제적 자유가치의 범세계적 전파, 4) 미국적 국제질서 창출 등을 내세움으로써 본격적인 ‘부활’을 예고하였다. 전통적 보수주의가 ‘국가개입 최소화’ ‘개인적 자유 극대화’ ‘반공주의’ ‘작은 정부’ ‘소극적 국제개입주의’를 이념적 특징으로 삼는 반면, 신보수주의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연방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국제현안에 대한 능동적 개입을 주장하였다. 2000년도에 대통령 선거에서 신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대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존 맥케인(John McCain) 상원의원을 선택했다. 그러나, 맥케인 의원이 공화당 경선에서 패함에 따라 신보수주의자들은 극심한 좌절을 경험했다. 이러한 좌절감은 ‘다행스럽게도’ 체이니 전 국방장관이 부시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됨에 따라 희망으로 뒤바뀌었으며, 부시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자 신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상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9·11 이전까지 부시 대통령의 모습은 신보수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9·11 이후 부시 대통령은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김성한, “미국의 세계전략과 신보수주의의 미래,” 『국제관계연구』, 2003년 여름호.

3) 1998년 1월 26일 신보수주의 핵심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빌 크리스톨(Bill Kristol) 미국신세기계획(PNAC) 의장, 폴 윌포위츠(Paul Wolfowitz)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장, 빌 베네트(Bill Bennett) 전 교육부장관, 리처드 펄(Richard Perle) 전 국방차관보, 로버트 케이건(Robert Kagan) 카네기재단 수석연구원 등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중동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군사적 수단을 통해 교체할 것”을 건의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를 ‘정중히’ 거절했다.

‘부시 독트린’의 첫 번째 적용 대상국으로 사실상 이라크를 지목하였다. 프랑스, 러시아, 중국도 동참했던 2002년 안보리 결의 1441호는 사담 후세인이 전면적인 무장해제를 거부할 경우 ‘심각한 결과’(serious consequences)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심각한 결과가 바로 무력 공격일 것이라는 점은 후세인도 익히 짐작할 수 있었다. 영국의 블레어 총리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거의 소진한 부시 대통령은 12년 동안이나 유엔을 ‘농락’해 온 후세인 정권을 군사적으로 응징하는 것은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라크에 대한 프랑스와 러시아의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군사적 조치를 위한 유엔의 합법성 획득에는 실패했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은 WMD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후세인의 폭정을 종식시키는 것 또한 미국이 이라크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믿었다.⁵⁾

부시 행정부의 생각은 이라크의 민주화를 시발로 중동 전역에 민주주의를 확산시켜 ‘민주평화지대’(zones of democratic peace)를 건설해야만 테러리스트들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2차대전 직후 독일과 일본에 미군이 진주하여 당시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민주주의 정착을 실현한 것처럼,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심어 여타 중동국가들로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는 키신저나 브레진스키와 같이 군사력의 신중한 사용을 역설하는 전통적 현실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선뜻 동의할 수 없는 너무나도 ‘이상주의적인 발상’이었다.

결과적으로, 후세인의 ‘WMD 게임’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후세인의 폭정은 WMD 의혹과 결부되어 비록 ‘절차적 정당성’ 획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내용적 정당성’을 상당히 제공한 상태였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를 ‘선제공격 독트린’의 즉각적인 대상으로 삼기에는 WMD 관련 정보가 충분치 못했고, 그로 인해 종전 후까지도 정당성의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 되었으며, 동시에 이라크 내 저항세력의 사기를 올려주어 이라크 상황의 악화를 초래했던 것이다.

2. 미국과 중동의 불가분성

1) 기로에 선 중동의 미래

2003년 5월 1일 이라크전 종결 후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에 의한 이라크 안정화 정책이 강한 저항에 부딪치면서 현재까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종전선언 직후 미 군정에 의한 이라크 군대의 조기해산이 이라크 전후 관리의 최대 실책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권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현 상태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라크에서 철수할 경우 이라크는 물론 중동 전역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현실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라크 임시정부에게 주권이 이양 되었지만 국제사회의 참여확대를 전제로 한 미국 주도의 재건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중동지

4) 이라크와 연간 교역액이 약 40억불인 러시아는 이라크내 석유시추 관련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러시아 석유회사 Lukoil은 이라크 West Qurna 지역에서 연간 약7억불 상당의 원유를 채굴해왔다. 전쟁직전 러시아는 이라크 무기구입 관련 70억불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의 경우 유엔이 이라크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여 생필품 구입을 위한 원유생산을 허용한 「Oil for Food Program」의 최대 수혜국임과 동시에 이라크의 군수산업 발전의 일등공신이었다. David M. Shribman, “Russia, France Offer Gauge for Iraq Policy” *Boston Globe*, March 12, 2002.

5) 부시 대통령은 2002년 9월 1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국민 탄압행위야말로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함으로써 이라크 개입 이유가 단순히 WMD만이 아님을 시사하였다.

역의 정부고위직 인사들조차 유엔주도의 재건사업에 대해 비관적이며, 미국주도하에 유엔의 역할이 확대됨으로써 유럽이나 아랍 등 국제사회의 역할을 이끌어내어 이라크사태를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⁶⁾

중동의 정치지도자들은 지역안보와 관련 “유럽이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인식하며, “미국 없는 중동”을 상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균형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기대함으로써 미군의 주둔까지 용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좋은 싫든 미국과 중동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중동인들이 이라크사태와 관련 유엔역할의 확대를 논할 때 유럽의 참여를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하나, 정치엘리트들의 공통된 견해는 역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 문제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뛰어넘은 미국의 ‘대중동구상’(The Greater Middle East Initiative)에 대해 중동 현지의 반응은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 대중동 민주화 구상과 관련, 중동의 정치엘리트들은 민주화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외부로부터의 개혁 압력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표시하며, 정치개혁보다는 미국이 경제·사회적 개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결국 미국의 대중동 민주화 구상은 정치적으로는 팔레스타인문제와 이라크사태의 진전여부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미-중동 자유무역지대 창설안”의 가시적인 성과와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

역시 가장 큰 걸림돌은 중동 내의 반미감정 고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교착화된 이라크사태와 이·팔문제로 인하여, 중동 각국의 정부 및 대중이 공히 반미감정을 표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미국 자체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미국의 이중잣대(double-standard) 및 특정 정책에 대한 반감의 성격이 짙다. 중동지역의 정치엘리트들은 반미감정에 대한 적극적 통제가 오히려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미 행정부와 정책적 협조를 하면서도 국민들의 반미감정 표출을 묵인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이라크 사태의 해결여부는 중동전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이며,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어떻게 해서든 이라크인들이 안정적 정치경제질서를 정착시키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상황이다. 한국의 이라크 파병은 이렇듯 거시적 중동질서와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함께 연관된 문제인 것이다.

2) 유엔결의 1546호

유엔 안보리는 2004년 6월 8일 이라크의 완전한 주권회복을 재확인하고 이라크 임시정부와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과의 관계를 규정한 새 이라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 15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결의 1546호’에는 이라크 과도정부에 미군주도 다국적군의 철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프랑스와 독일 등의 주장을 수용했다. 반면 다국적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과도정부에 줄 수 없다는 미국과 영국의 입장도 반영되었다. 새 결의안은 또 이라크 미군정의 상징인 연합군 임시행정처(CPA)를 해체하며 늦어도 2005년 1월 31일까지 총선거를 통해 이라크의 합법적인 정식정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이라크 정치일정을 명확히 했다. 결의안은 또한 석유수출대금의 관리를 과도정부에게 넘겨줄 것을 명문화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경제적 양보를 통해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냈

6) 외교안보연구원 중동현지조사팀(팀장: 김성한) 2004. 4. 26~5. 3 이집트-요르단-아랍 에미리트의 주요 관계 기관을 방문, “미국의 대중동정책과 한·중동관계 전망”을 주제로 연구조사를 행한 결과(이하 「외안연 중동현지조사 결과」).



으며, 미국주도의 이라크 전쟁을 비판했던 프랑스와 독일 등은 이라크 재건에 참여할 수 있는 '허가증'을 얻어낸 셈이다. 이렇듯 본 결의안은 참전국과 비참전국의 이해득실을 절묘하게 조합함으로써 미국만의 전쟁이 아닌 미국과 유럽, 더 나아가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전쟁이라는 명분을 창출했으며, 이라크 민주화를 향한 대장정의 국제적 지지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 1988년 자국민 쿠르드족 5,000명을 화학무기로 학살하고 수많은 인권유린을 행한 후세인 정권은 1991년 걸프전 종료 직후부터 2002년까지 무장해제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17차례나 지속적으로 거부했으며, 유엔이 외교적 압박과 경제봉쇄를 통해 제재를 가했지만 사담 후세인은 '부분적인' 협력을 통한 지연전술을 폈을 뿐 '전면적인' 협조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세인의 'WMD 게임'은 WMD 보유 가능성에 대한 미 행정부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 후세인의 폭정은 WMD 의혹과 결부되어 비록 '절차적 정당성' 획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내용적 정당성'을 상당히 제공한 상태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를 '선제공격 독트린'의 즉각적인 대상으로 삼아 군사적 공격을 가하기에는 WMD 관련 정보가 불충분했고, 그로 인해 이라크전의 정당성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종전 후 이라크 내 저항세력의 사기를 올려 주어 사태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사태의 해결여부는 중동전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으므로(유엔 결의 1546호), 한국의 이라크 파병은 한국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거시적 중동질서유지와 이라크에 대한 인도주의적 기여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III. 파병논의의 출발점

1. 한미동맹의 전환기적 도전 극복

미국에 의한 한국의 이라크 추가파병 요청은 2003년 9월 한미관계가 한국 내 반미감정 문제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전환기적 도전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50년간 지속되어온 한미동맹관계는 냉전기에 형성된 그 어떤 동맹보다도 성공적인 동맹이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견고한 군사동맹으로 발전해 왔다. 50년 전 서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의 위협 이외의 공감대가 없었던 양국이 이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긴밀한 유대를 구축하기에 이른 것이다. '북핵 위기'로 상징되듯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양국이 경제 및 사회적 상호의존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은 한미동맹이 강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현재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북핵위기와 북한의 불확실한 장래가 그것이다. 2002년 10월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이 드러나면서 야기된 '제2차 북핵위기'에 대한 대응방식을 놓고 한미양국간에 미묘한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이 끝

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장래가 더욱 불투명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상이한 각도에서 한미양국의 고민을 배가시키고 있다. 북한이 ‘민족공조’를 내세우며 한미관계를 이간시키기 위한 집요한 노력을 전개함에 따라 한미관계가 고민해야 할 부분도 그만큼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둘째, 한국 내 민족주의와 반미감정의 증대도 한미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세계화의 물결을 잘 활용하여 한국의 국가이익을 증대시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는 한반도 차원을 뛰어넘지 못하고 한반도에 안주해 버리려는 민족주의적 정서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한 민족주의적 감정은 2002년 월드컵과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폭발적인 반미감정으로 확대되어 한미동맹을 위협하였다.⁷⁾

셋째, 미 대외정책의 우선순위 변화와 일방주의 외교도 한미동맹의 도전요인이다. 9·11 테러사태이후 미국외교는 반테러전쟁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테러위협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국제사회의 인식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미국외교는 동맹국들의 입장을 배려하기 보다는 일방주의적 성향을 띠어가고 있다.⁸⁾

마지막으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 점도 한미동맹의 도전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남북한간 관계에서의 중국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한 예는 1997년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였던 황장엽의 망명과 관련된 것이다. 그를 인도해 달라는 북한의 항의와 간청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은 비록 필리핀을 거쳐서이긴 하지만 결국 그를 남한에 가도록 허락했다. 황장엽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북한인이 그들의 탈주로로 중국을 택한다. 중국이 이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는 중국과 남한 관계뿐만 아니라, 장래 북한정권의 운명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실 북한정권의 생존 자체가 베이징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중국은 이미 북한에 대량의 식량을 제공해오고 있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자가 부족하게 될 경우 그 부족분을 메워줄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90%를 차지한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은 말 그대로 북한정권을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치에 있으며, 이는 남북한 관계에게 있어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이외에도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3자회담과 6자회담 성사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두드러졌고, 문화적으로 중국에 대해 더 친밀감을 느끼는 한국민들 상당수가 한중관계를 한미관계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⁹⁾ 현재로서는 중국조차도 한중관계가 한미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현가능성도 없다고 보는 마당에 이는 대단히 비현실적인 발상

7) Kim Sung-han, "Anti-American Sentiment and ROK-U.S. Relation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Fall 2003, pp.105-130.

8) 미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장을 지냈던 Richard Perle은 위원장 재직 중인 2002년 3월 독일에서 있었던 한 세미나에서 "만일 미국이 테러리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미국의 동맹국관계를 유지하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전자를 택할 수밖에 없다. . . 미국의 정책적 최우선 순위는 국제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고 언급함으로써 미국적 일방주의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였다. BBC, March 2, 2002. 이러한 미국의 모습이 결국 베트남전에처럼 미국 국력의 내재적 한계를 드러낼 뿐이므로 미국이 동등한 국가들중 가장 주도적인 국가로서(first among equals)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으로는 Bruce Cumings, "Is America an Imperial Power?" *Current History*, November 2003 참조.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에 바탕을 둔 미국외교가 테러나 WMD와 관련 없는 인도적 사태에 대한 미국의 무관심으로 귀결될 위험성이 크다는 주장으로는 Kim Sung-han, "The End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Orbis*, Fall 2003, pp.721-736 참조.

9) 미·중관계의 구조적 특성에 관해서는 David Shambaugh, "Sino-American Strategic Relations: From Partners to Competitors," *Survival*, Spring 2000 참조.



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한국 삼각형’(Korean triangle)에 대해 이야기 할 때, 통상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한국을 생각하나 최근에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놓인 한국을 뜻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유럽과 같은 다자안보협력체제가 부재한 동북아에서는 한·미·중 삼각형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한국에게 미국을 통한 자율성 확보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미국을 배제한 한·중·일 삼각형보다 한국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한다. 향후 한국의외교의 도전은 한중관계와 한미관계를 제로섬 관계가 아닌 포지티브섬 게임 관계로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3년 한 해 동안 한미관계의 화두는 ‘북핵’, ‘주한미군 재배치’, 그리고 ‘이라크 파병’이었다. 그 중에서도 이라크 파병은 파병여부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 국론분열의 양상까지 초래했으나, 한편으론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한미동맹의 미래를 고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결국 이라크 파병 문제는 한미동맹의 도전을 극복하고 양국관계의 미래를 설계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2. 판도라 상자 닫기

2003년 5월 1일 이라크전 종전 후 미국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재건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정착에 주력하는 한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을 통한 중동질서의 재편을 추구해오고 있다. 미 연합당국(CPA)은 예정일보다 이틀 앞당겨 2004년 6월 28일 이라크 과도 통치위원회에 권력을 이양하였다. 그러나 이라크 내 치안유지를 위해 상당기간 동안 미군이 이라크 내에 주둔할 것이며, 치안상황의 개선 여하에 따라 점차 주둔병력의 규모를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 치안활동의 책임을 다국적군과 이라크인들에게 단계적으로 이양하되 그에 앞서 이라크 내 민병대 창설, 경찰 및 국병수비대 증강과 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¹⁰⁾

이라크 전쟁을 전후하여 미국과 유럽, 특히 미국과 독·불 간의 갈등이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었으나, 2004년 2월 독·불·일 등이 이라크 재건사업 공동추진에 합의함으로써 이라크 평화유지 및 재건과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했다.¹¹⁾ 초조해진 테러리스트들이 미국과 동맹국 관계를 이간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2004년 3월 스페인에서 알 카에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자 급기야 스페인에 야당이 집권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라크에서 스페인군이 철수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외국계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무차별적인 테러행위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자 주요 강대국들은 이라크 문제를 미국의 제국주의전쟁이 아닌 반테러전쟁의 일환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열어놓은 ‘판도라의 상자’를 어떻게 해서든 닫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의 주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이 선제공격 독트린을 이라크에 성급하게 적용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지만, 국제사회가 이라크를 포기할 경우 중동이 무질서와 혼돈상태로 빠져들게 되고, 테러가 더욱 활개를 치게 될 것이므로 국제사회가 이라크 재건을 중도에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입장을 모아가고 있는 것

10) 미국은 총 22만6,700명의 치안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우선 1차적으로 경찰 7만1,000명, 시민방위군 4만명, 그리고 이라크군 4만명 양성을 위한 모집 및 훈련을 실시 중이다. Pentagon, *Iraq Status* (draft, December 2003).

11) 미·유럽 간의 소위 ‘대서양 관계’에 관해서는 Andrew Moravcsik, "Striking a New Transatlantic Bargain,"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03 참조.



이다. 반테러전쟁이 미국만의 문제인 것으로 국제사회가 방치할 경우 이라크 사태의 악화는 물론 중동전체의 혼란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무질서로 이어져 결국 ‘테러리스트들의 세상’이 도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감하기 시작했다. 테러리스트들의 세상이란 미국이 세계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신고립주의적 성향’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가 미국이 행사해 온 힘의 공백을 채우지 못한 채 ‘흡스적 세계’, 즉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가 본격화하는 세상이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이롭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파병문제는 이라크의 판도라 상자를 닫는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반테러전쟁을 미국만의 전쟁이 아닌 국제사회 전체의 전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라크 파병을 한국의 중장기적 국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 북핵 위기와 북한의 불확실한 장래, 한국 내 민족주의 및 반미감정 증대, 미 대외정책 우선순위 변화와 일방주의 외교,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 등 한미동맹에 대한 안팎의 도전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논란은 국민들에게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결국 이라크 파병 문제는 한미동맹의 도전을 극복하고 양국관계의 미래를 설계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 미국이 이라크에서 열어놓은 ‘판도라의 상자’를 어떻게 해서든 닫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의 주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 반테러전쟁이 미국만의 문제인 것처럼 방기할 경우 결국 무질서가 난무하는 테러리스트들의 세상이 도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 한국의 이라크 파병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IV. 이라크 파병과 한국의 국가이익

1. 용신(用信): 21세기적 신용제고

국론분열에 버금가는 논란 끝에 우리 정부는 2003년 말 이라크에 약 3천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주도의 다국적군 파병과 이라크 재건 지원을 결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511호(2003. 10. 16)에 따른 파병이며, 유엔 회원국으로서 세계경제 12위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평화유지 의무를 적극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¹²⁾ 물론 첫 번째 고려변수는 한미동맹이었다.

이라크 파병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우선 2002년 말 ‘촛불시위’ 이후 상호간 ‘신뢰’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한미관계가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새롭게 재정

12) 파병부대 편성의 특징은 재건임무 수행에 적합한 부대 그리고 생존성이 보장되는 부대를 편성한다는 것이다. 재건지원대대는 전후복구 지원 및 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자치행정기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 공병부대 역시 전후복구 지원활동과 기술학교 운영 등 소위 ‘친한화’(親韓化) 활동을 하게 되며, 의무부대는 현지인 및 우리 장병의 진료를 맡게 된다. 특히 재건지원대대의 경우 현지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민지원 임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며, 평시 재건지원 및 민사작전 수행을 위해 잘 훈련된 부대로서 동티모르에서 4년간 인도적 지원 및 재건지원활동의 경험을 축적한 간부 위주로 편성되었다.

비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군이 다른 어떤 나라의 군대보다도 이라크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파병 요청을 하였다. 서희·제마 부대는 이라크 나시리아 지역에서 건설 및 의료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동티모르 지역에 다국적군으로 파견됐던 상륙수부대의 활동에서 증명되었듯이 한국군의 평화유지 활동은 세계 정상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은 또한 한국군의 종교적 중립성에 기대를 건다. 한국군은 기독교적 색채가 없을 뿐만 아니라, 70년대 중동건설 등으로 지역적 반감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미국은 한국군 파병이 현지주민의 반미감정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9·11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미국은 동맹관계를 평가하는 데 있어 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전쟁에 참여하는가, 반대하는가, 아니면 중간자적 위치를 보여주는가라는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오고 있다. 냉전시대에 미국은 동맹국들을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대가로 미국의 리더십을 따르도록 요구했었다. 그러나, 21세기 미국의 동맹개념은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국제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신용’을 제공하는 대신 미국의 리더십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동맹은 20세기적 ‘혈맹’(血盟) 개념으로부터 21세기적 ‘신맹’(信盟) 개념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이라크 파병은 미국과의 신맹을 향한 투자이다. 이라크 재진참여라는 동맹관계의 재평가 결과는 안보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가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이 ‘세계표준’으로서 전 세계 대부분 나라의 경제적 신용도를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이상, 스페인처럼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낮고 EU라는 대체시장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한국으로서는 이라크 파병문제를 국가경제의 생존전략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협력적 자주국방’을 내세우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한미간의 신뢰회복이 전제되어야 양국간의 방위산업 협력이나 기술이전이라는 과실(果實)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지 못할 경우 기술이전을 전제로 한 한국과의 방산협력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미국이 국제사회에 막강한 규모로 행사하는 신용을 이용하는 ‘용신’(用信)의 과정이다. 20세기 동맹이 ‘주둔’과 ‘인계철선’에 의해 신용을 고정적으로 담보 받았다면, 21세기 동맹은 미국의 새로운 군사패러다임 중의 하나인 ‘유동군’ 개념에 입각한 ‘유동적 신용’이기에 보다 철저하고도 전략적인 용신이 요구된다. 국제경제와 안보분야에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가는 용신의 과정이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신용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나 이란이 21세기를 살아가기가 얼마만큼 힘들 것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2. 에너지 안보의 확보

이라크 파병의 또 한가지 의미는 파병을 계기로 한국이 미국과 함께 유라시아 ‘거대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앙아시아와 중동지역을 포괄하는 유라시아 지역은 카스피해 연안을 중심으로 거대한 양이 매장되어 있는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과 이를 국제시장으로 운송하는 송유관 경로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벌이는 미국, 러시아, 터키, 이란, 파키스탄, 인도 간의 각축전이 ‘거대 게임(great game)’의 양상을 띠고 있는 지역이다.¹³⁾

13) 19세기 중앙아시아 지역을 놓고 영국과 러시아가 벌인 식민지 쟁탈전을 의미했던 ‘거대 게임’은 유라시아 발

9·11 테러사태 이후 중앙아시아는 미국의 반테러전쟁, 특히 아프간 전쟁 수행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전초 기지로 등장하였다. 2001년 10월 아프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군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 등에 5,000명 이상 주둔하게 되었으며, 군사기지 및 수송시설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아프간 전쟁 이후 미국은 탈레반 정권 붕괴에 따라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중앙아시아와 여타 주변국들로 분산되었다고 보고 미군의 중장기적인 주둔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제2, 제3의 아프가니스탄이 등장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중앙아시아에 영구적인 군사기지를 설치할 의도는 없다”고 하고 있으나, 상당 기간동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안정자’(stabilizer)의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러시아로부터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싶어한다. 결국 미국의 중장기적인 대 중앙아시아 전략은 궁극적으로 NATO가 동유럽과 ‘유라시아 발칸’ 지역(코카서스 3국 + 중앙아시아 5국)을 자연스럽게 포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¹⁴⁾ 이를 위해 미국은 러시아로 하여금 기존의 대 중앙아시아 영향력을 다시금 확대하지 않도록 하고(“Russia Down”), 중국이 이 지역 ‘거대 게임’(great game)의 일원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China Out”),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속에 (“America In”) 이들 나라들과 협력 기조를 유지해 가는 데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¹⁵⁾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거점을 기존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라크로 전환하려는 중동 질서 재편 전략의 일환이며, 중장기적으로 이라크의 재건을 통하여 바그다드를 중동의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의 시발점이다. 무엇보다 이라크가 재건에 성공할 경우 한국은 미국과 함께 카스피해 서쪽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며, 카스피해는 세계 최후의 미탐사·미개발 유전지대로 현재 유전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계획이 추진 중이다. 중동으로부터의 석유수입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야 할 입장이므로,¹⁶⁾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정책이 군사정책 위주가 아닌 보다 ‘포괄적’ 차원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이라크 파병은 한미동맹을 활용하여 한국의 중장기적 국가이익을 도모해 가는 보다 큰 전략적 고려의 산물인 것이다.¹⁷⁾

칸지역의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이 쿠웨이트, 멕시코만, 북해 지역 매장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강대국과 지역강국들간의 경제적 쟁탈전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9·11 테러이후 아프간 전쟁을 통해 미국이 이 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됨에 따라, 반테러전쟁을 구실로 향후 ‘거대 게임’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정치·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었다.

14) 브레진스키는 향후 몇십년간 세계에서 가장 유동적이고 위험한 지역이 바로 유럽과 극동 사이에 위치한 유라시아 지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에 따르면, 유라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당면한 도전은 반 세기 전 유럽에서의 도전보다 더 복잡하고 힘들 것이다. 유럽에서 미국은 가치를 공유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우방국이 있었기 때문에 마샬플랜, NATO 등을 통해 유럽을 재건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유라시아에서 미국은 파트너 국가의 부재 뿐만 아니라 자원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라는 장애에 부딪치게 된다. 결국 안정된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양자가 유라시아 문제를 공동의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처해 나갈 때만 동 지역의 안정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Zbigniew Brzezinski, "Hegemonic Quicksand," *The National Interest*, Winter 2003/2004.

15) 김성환, “아프간 전쟁이후 美國의 對중앙아시아 정책,” 「주요국제문제분석」(외교안보연구원, 2002. 7. 14)

16)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이라크 파병의 실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용승, “이라크 파병에 따른 국익은 뭔가,” 「국방저널」, 2003년 11월호, pp.34-37 참조.

17) 현대건설(11억 4백만 달러)을 포함한 한국 업체들은 이라크에 대해 17억 6,904만 달러(약 2조 1,200억원)의 미수금(상업채권)을 갖고 있으며, 채권회수를 위한 공동전략 추진을 위해 이라크 민간 상업채권을 가진 각국 업체



3. 이라크 인간안보 제고

한국이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은 이라크 국가 재건과정에 한국이 기여함으로써 이라크 국민들의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개선시키기 위함이다.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라크 전쟁이 명분 없는 전쟁이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한국은 이라크에 파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담 후세인의 폭정으로부터 해방되기는 했으나 이라크 국민들의 삶이 아직도 고통스럽고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이라크인들의 인간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평화재건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이 한국의 이라크 파병 명분인 셈이다.

냉전종식 이후 국가간 전쟁보다는 종족 및 종교갈등, 이로 인한 난민 발생, 경제적 고통 및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면서 전통적 의미의 군사안보 이외에 인권, 마약, 테러, 환경, 난민 등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¹⁸⁾ 그 결과, 유엔을 비롯한 정부 및 비정부기구들은 이러한 비전통적 안보 이슈들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을 전통적 군사안보위협과 더불어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문제로 파악함과 동시에 인간의 복지 및 안위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인간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인간안보는 단순히 군사적 위협의 부재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는 경제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적절한 수준의 삶의 질, 그리고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보장을 뜻한다. 인간안보는 최소한 인간의 기본적 필요(basic needs)가 충족되는 것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견고한 평화와 안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인권, 자유, 법치주의, 사회적 형평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¹⁹⁾ 인간안보의 핵심은 역시 인권이다. 전략연구에다 규범적 가치를 접목시키는 시도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최근 미 외교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민주적 평화론’(democratic peace), 즉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가설이며, 이는 곧 국제관계에서 있어서 인간안보가 보다 견고해질수록 평화에 접근할 수 있다는 논리와 연결된다.²⁰⁾

그렇다면, 인간안보의 핵심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비민주국가에 대해 민주국가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한 국가가 국제 규범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인권 침해행위를 ‘광범위하게’(in a massive scale) 범한다면 여타 민주국가들은 어떠한 행동을 보여야 하는가의 문제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응양식에는 국제여론을 통한 압력에서부터 경제제재 및 군사적 개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고가 바로 “인

체간 국제협회의체인 ‘워싱턴 클럽’에 가입하였다. 한국으로서는 중장기적으로 이라크가 평화적으로 재건되어 미 수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하나, 그 전에 재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문제는 재건사업 참여 여부를 미국이 결정한다는 점이다. 최근 미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186억달러의 자금을 가지고 재건사업을 할 나라들, 즉 Core Group(미국, 일본, EU(영국, 스페인))에 2004년 1월 한국을 포함시키고, 그 결과 현대건설이 2004년 3월 미국 임시행정처(CPA) 산하의 이라크 재건공사시행위원회(PMO)가 발주한 이라크 재건사업 가운데 2억2,000만 달러(약 2,600억원)어치를 수주한 것은 한국의 이라크 파병 결정과 무관치 않다고 할 수 있다.

18) Kim Sung-han, “Human Security and Regional Cooperation: Preparing for the Twenty First Century,” William Tow et als eds., *Asia’s Emerging Regional Order* (Tokyo: UN University Press, 2000) 참조.

19) Lloyd Axworthy, “Canada and Human Security: the Need for Leadership,” <http://www.dfait-maeci.gc.ca/english/foreignp/sechume.htm>. (검색일 2002년 10월 1일)

20) Ramesh Thakur, “From National to Human Security” in Stuart Harris & Andrew Mack, eds., *Asia-Pacific Security: The Economics-Politics Nexus* (Allen & Unwin, 1997), p.73.

류의 보편적 가치에 의거하여 더 이상 국가주권(national sovereignty)을 이유로 대규모 인권탄압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신국제주의’(new internationalism)이다.

비민주국가들이 국내적으로 시민들의 자유와 재산권의 확보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원칙을 지킬 필요가 없고, 그로 인해 민주국가들과 비민주국가들간의 관계는 신뢰와 안정된 예측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민주국가들이 비민주국가들의 잘못된 행동을 중지시키거나 더 나아가 민주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십자군적 전쟁(crusade)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국가들의 군사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나토가 코소보 사태에 개입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인식에 입각한 ‘인도적 군사개입’(humanitarian military intervention)이었으며, 인간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신국제주의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저지라는 목적이 외에도 사담 후세인의 폭정을 종식시키기 위한 인도적 목적을 가지고 행해졌으므로 이를 인도적 군사개입의 일환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인권이 국가주권을 능가하는 행위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인간안보의 문제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다차원적 노력이 요구되는 사안인면서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여전히 민족국가간의 경계선이 국가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보편적 가치의 확산과 국가간 상호의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중적 세계’(dualistic world)이기 때문에 인간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구현 방법들 간에 긴장감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의 동기에 관해 한미간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어도 이라크 전쟁이후 이라크 내의 평화재건을 통해 이라크인의 인간안보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인간안보를 위해 한미양국이 협력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이 전통적인 군사안보적 성격을 뛰어넘어 인류의 보편가치를 지향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의 향후 ‘비전’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9·11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미국은 동맹관계를 평가하는 데 있어 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전쟁에의 참여 여부를 가장 큰 기준으로 적용해오고 있다. 냉전시대에 미국은 동맹국들을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대가로 미국의 리더십을 따르도록 요구했었으나, 21세기 미국의 동맹개념은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세계화된 국제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신용’을 제공하는 대신 미국의 리더십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동맹은 20세기적 ‘혈맹’(血盟) 개념으로부터 21세기적 ‘신맹’(信盟) 개념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이라크 파병은 미국과의 신맹을 이룩하기 위한 투자, 즉 ‘용신’(用信)의 과정이다.
- 미국은 이라크의 재건을 통하여 바그다드를 중동의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라크가 재건에 성공할 경우 한국은 미국과 함께 카스피해 서쪽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어 에너지 안보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 이라크의 평화재건을 통해 이라크인의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한미간 이견이 있을 수 없으며, 인간안보를 위해 한미양국이 협력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이 전통적인 군사안보적 성격을 뛰어넘어 인류의 보편가치를 지향해 간다는 것을 뜻한다.

V. 이라크 파병과 한미동맹의 비전

북한 변수가 사라진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 고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일간의 지역패권경쟁 가능성은 북한의 위협보다 더 큰 고민을 한국에게 안겨줄 지 모른다. 북한지역의 재건을 위해 엄청난 재원을 쏟아 붓게 될 통일한국은 상당기간 동안(통일독일의 경우를 감안했을 때 20년 이상) 중국과 일본에 대한 국력의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 힘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외부의 간섭 없이 통일과정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균형자’(regional balancer)의 역할을 하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퇴각’하지 않도록 한미간에 강한 연대의 끈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동안은 한미동맹의 현 골격을 유지하되,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한미동맹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에 한미동맹을 재조정하기 보다는 그 이전에 동맹의 ‘21세기적 비전’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한미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한미동맹의 비전은 ‘포괄적 동맹’(comprehensive alliance)의 구축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위협에 대응하기보다는 평화를 주도해 나가는 동맹, 그리고 보다 유연하고 독자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관계를 실현하는 동맹, 더 나아가 상호 운용성이 지금보다 더 확대된 동맹관계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포괄적 동맹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측면에서의 역할 확대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비전의 한 부분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미 포괄적 동맹 관계는 전통적인 군사 위협에 대처한다는 차원보다는 새로운 안보 위협, 즉 테러, 마약, 환경오염, 불법인구이동, 해적 행위 등에 포괄적으로 대처해 나감으로써 역내 다자안보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21세기형 ‘인간안보동맹’(human security alliance)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의 규범적 받침대는 자유민주주의이므로, 양국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미양국은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인권증진, 환경보존, 인간밀매 및 해적행위 방지, 반테러,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등에 관한 공동의 ‘인간안보’ 아젠다를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미양국은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²¹⁾

그러나, 향후 상당기간 동안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나갈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동맹체제를 재정비하려고 할 때, 한미동맹이 미국의 안보전략가들의 머릿속에 여전히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한미동맹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선 한미양국간에 전략적 비전을 공유해야 하며,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동맹의 성격을 재조정해야 한다. 즉, 양국 모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차원의 전략적 이익”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동맹의 성격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의 국지전략을 조화하여 양자간에 일치된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²²⁾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미동맹체제는 한반도 통일 과정 시 중국의 부정적 역

21) A Joint Report by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Georgetown University, *Strengthening the U.S.-ROK Alliance: A Blueprint for the 21st Century* (2003).

22) 1996년 미국과 호주가 「시드니 공동선언」을 통해 민주주의, 경제발전 등을 함께 추구해 나가기로 한 것처럼, 그리고 1996년 미국과 일본이 「미일안보선언」을 발표하고 뒤이어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이룩해 냈듯이, 한미양국도 조만간 양국관계 미래의 청사진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할을 최소화하고 역내 안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 양국 모두 중국과의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는 관계여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체제와 더불어 미일동맹체제를 유지해 감으로써 미국을 통해 일본을 적절히 ‘관리’함과 동시에 한일 양국간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 조정 시나리오에는 ① 동맹해체후 한국의 핵무장, ② 한반도 중립화, ③ 다자안보체제 추진, ④ 한미동맹과 다자안보협력의 공존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네 번째일 것이다. 탈냉전기에도 NATO가 확대·강화되고 있듯이 동맹은 특정한 적성국만을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불안정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동맹국의 국익 저해요인을 사전에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탈냉전기 한미동맹은 전통적 군사동맹으로부터 ‘포괄적 안보동맹’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특히 경제안보와 관련된 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GPR과 주한미군 재배치로 시작된 한미동맹의 미래에 관한 논의가 이라크 파병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도 건설적인 비전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포괄동맹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통해 한미양국이 신뢰를 얼마만큼 회복하는지에 달려있다. 신뢰에 바탕을 두고 미국과 한국이 정치·안보·경제 분야를 망라한 신용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21세기형 동맹, 즉 신맹(信盟)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에 한미동맹을 재조정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동맹의 ‘21세기적 비전’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한미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위협에 대응하기보다는 평화를 주도해 나가는 동맹, 보다 유연하고 독자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관계를 실현하는 동맹, 더 나아가 상호 운용성이 지금보다 더 확대된 ‘포괄적 지역안보동맹’(comprehensive regional security alliance)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 한미 포괄적 동맹 관계는 전통적인 군사 위협에 대처한다는 차원보다는 새로운 안보 위협, 즉 테러, 마약, 환경오염, 불법인구이동, 해적 행위 등에 포괄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21세기형 ‘인간안보동맹’(human security alliance)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통해 한미양국간 신뢰가 얼마만큼 회복되는지에 달려있다. 신뢰에 바탕을 두고 미국과 한국이 정치·안보·경제 분야를 망라한 신용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21세기형 동맹, 즉 신맹(信盟)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VI. 삶과 죽음의 국제정치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제사회가 테러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21세기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반테러 전쟁을 미국만의 전쟁이라고 치부해버릴 경우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 반테러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에 결과적으로 국제사회는 무질서와 혼돈이 뒤범벅된 세상, 즉 테러리스트들이 바라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지나친 완벽주의와 군사만능주의가 국제사회의 반발을 초래할 경우 이 역시 예측하기 힘든 국제정치적 혼돈상

태를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유엔이나 다른 강대국들이 미국의 힘을 대신할 수 없는 이상 미국이 국제관계를 보다 현명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국제사회의 성원들이 지원하고 조언해야 한다.

이라크 사태의 복잡성 때문에 국론분열에 버금가는 논란 끝에 우리 정부는 2003년 말 이라크에 약 3천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 파병하기로 결정하였고, 2004년 2월 국회의 동의까지 마쳤다. 여러 요인으로 인해 파병이 지연되었지만 ‘김선일씨 사건’에도 불구하고 파병원칙이 지켜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파병 반대론자들은 우리의 젊은이들을 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아 죽음을 자초하느냐고 비판한다. 국익이 대체 무엇이기에 한 사람의 목숨보다 더 소중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여기서 우리는 ‘삶과 죽음의 국제정치’를 되새기게 된다.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당장의 ‘보이는 죽음’과 미래의 ‘보이지 않는 죽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순간의 전략적 판단 실수로 당장의 보이는 죽음을 피할 수 있을지언정 미래에 보다 큰 규모로 더욱 치명적인 형태로 다가오게 될 보이지 않는 죽음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된 국제금융사회에서 신용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IMF 사태’라는 뼈아픈 경험을 했고, 그나마 안보분야에서 쌓은 신용 덕분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파병을 철회함으로써 당장의 보이는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제2의 금융위기를 겪게 되었을 경우 안보분야의 축적된 신용을 통해 또 한번의 재활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삶의 희망을 잃은 가장들이 거리를 배회하는 보이지 않는 죽음을 과연 피할 수 있을까?

미국이 동맹에 입각하여 한국에 파병할 때 미군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듯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역시 한국군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상호간에 신용이 확인되고 교환되는 것이다. 물론 희생의 최소화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지만 말이다. 파병의 정치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삶과 죽음의 국제정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21세기형 새로운 동맹개념, 즉 ‘신맹’(信盟)의 모습을 정확히 실천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래의 보이지 않는 죽음을 막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바로 이라크 파병인 것이다.

- 반테러전쟁을 미국만의 전쟁이라고 치부해버릴 경우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 반테러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는 이상 국제사회는 무질서와 혼돈이 뒤범벅된 세상, 즉 테러리스트들이 바라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유엔이나 다른 강대국들이 미국의 힘을 대신할 수 없는 이상 미국이 국제관계를 보다 현명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국제사회의 성원들이 지원하고 조언해야 한다.
-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당장의 ‘보이는 죽음’과 미래의 ‘보이지 않는 죽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순간의 전략적 판단 실수로 당장의 보이는 죽음을 피할 수 있을지언정 미래에 보다 큰 규모로 더욱 치명적인 형태로 보이지 않는 죽음을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세계화된 국제금융사회에서 신용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IMF 사태’라는 뼈아픈 경험을 했고, 그나마 안보분야에서 쌓은 신용 덕분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파병을 철회함으로써 당장의 보이는 죽음을 막을 수 있을지라도 만일 우리가 제2의 금융위기를 겪게 되었을 경우 안보분야의 축적된 신용을 통해 또 한번의 재활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그러기에 미래의 보이지 않는 죽음을 막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바로 이라크 파병인 것이다. (끝)